기독일보

2021년 7월 1일 목요일 (음력 5월 22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1831호

청년들도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반대 목소리

청년 진평연, 6월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처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반대 대열에 청년들이 합류했다. '청년 진평연'(공동대표 김광수·김선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청년연합)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 목소리를 낸 것.

이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지난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을 발의한 직후 결성됐다고 한다.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은 목회자와 법률가 등을 중심으로 이미 결성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에 앞장서 온 단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김광수 대표, 참인권청년연대 김선규 대표, 성인권센터 김원재 대표, 성평화연대 이명준 대표, KELLA 유중원 팀장,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최다솔 대표, 바른교육청년연대 최동환 청년 등 이 참석했다.

◈ "국민들 속지 않아… 반대에 28만 서명·10만 청원"

청년 진평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성인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 주장하고 믿으면, 여탕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법이었다. 남·녀 간의 성관계만 교육하는 것은 차별이니 동성 간 또는 다자간 성관계도 교육해야만 하는 법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발의된 평등법안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의 유사품"이라고 했다.

청년들은 "우리는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권력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위임한 권력이고,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권력 행사는 허락되지 않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믿는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에 속지 않은 우리 국민들은, 지난해 10월 27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약 28만 명의 서명과 지난 22일 평등법을 반대하는 10만 명의 청원으로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고 했다.

진평연은 지난해 10월 2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 277,299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했었다. 또 평등법안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나흘 만인 지난 22일, 동의 수 요건인 10만 명을 충족했다.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위해 21가지 사안 끼워팔기"

청년 진평연은 지난해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23가지 차별 금지 사안을 4가지 영역에 적용해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을 통해 차별금지법의 23가지 차별 금지 사안 중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두 가지 사안 외에 대해서는 이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마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야만 나머지 21가지 사안이 보호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인질극과 같다"고 비판했다.

"누가 몰래 못된 법을 만드는가" 청년 진평연이 6월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입법화하려는 정의당의 국민 기만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청년 진평연

이들은 "만약 정의당이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사안별 입법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며 "사안별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지원해야 하는 정도의 격차가 현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21가지 사안을 대하는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이용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라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할 수 없는 개념을 입법 시도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입법화하기 위해, 나머지 21가지 사안을 끼워팔기 하는 파렴치한 시도를 이제는 중단하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뒤에 숨지 말라"고 했다.

◈ "성적지향이 뭔지 설명도 않는 평등법안은 비겁"

평등법안에 대해서는, 이 법안엔 차별금지법안과 달리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설명도 없다"고 했다. 이들은 "'근로자, 출신 지역' 등은 자세히 설명하면서 법안에 명시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지 않는 '평등법'(안)은 여러모로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청년들은 "비겁한 정치의 결과는 '평등법'(안)을 발의한 지 6일 만에 10만 명의 반대로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입법예고안을 시작으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입법하려는 시도가 벌써 11번째"라며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라는 빌런(Villain, 영화 등에서의 악당-편집자 주)이 법안명만 바꿔가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도전을 11번이나 시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공격을 받으면 국민의힘 당내에서 이런 시도를 전담해서 방어하는 의원을 공천하든지, 연구 자료를 발표하든지 해야 정상적인 보수정당"이라며 "그런데 매번 국민들이 대신 집회와 시위로 막아내고 있고, 국민의힘은 구경하듯 방관하는 모습을 이제는 참을 수 없다"고 했다.

청년들은 "신앙과 표현의 자유, 가정과 국가의 기초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한편, 청년 진평연은 청년 회원을 모집(http://naver.me/56IkOcO5)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200여 명의 청년이 가입했다. 노형구 기자

'기관→지자체' 입양체계 개편에 "극단적" 비판

전국입양가족연대, 성명 통해 시행 중단 촉구

전국입양가족연대(대표 오창화·사진, 이하 입양연대)가 입양체계 개편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6월 30일부터 친생부모가 아동의 입양을 의뢰하기 위한 창구가 입양기관에서 시·군·구 지자체로 변경된다.

입양연대는 성명에서 "지난 70여 년 동안 초기 입양상담의 주체였던 입양기관이 법적으로 배제되고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이 6월 30일자로 시행된다"며 "입양체계 개편은 철저히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이라고 했다.

이들은 "아동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유연한 방식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점검하고 대안 마련을 미리 해두어야 한다"며 "더군다나 70년 동안 존재했던 질서를 하루 아침에 뒤집는 개편이다. 보건복지부에 의해 주도되는 6.30 입양체계 개편은 그동안 상담을 주도했던 당사자를 일순간 배제해 버리는 극단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제된 자리를 대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현황은 놀라울 정도로 형편없다. 입양 뿐 아니라 보호아동에 대한 모든 업무를 전담하게 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인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겨우 작년 10월부터 전국 지자체에 순차적으로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입양연대는 "시행시기를 기준으로 최장 8개월 경력의 요원들이 보호아동의 평생의 삶을 결정짓게 된다. 이 요원들의 업무지침서인 매뉴얼이 최종 완성된 것도 불과 몇 달 전"이라며 "극단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의 체계개편을 통해 자리를 차지한 요원들 뿐만 아니라 개편되는 업무조차도 전혀 현장에서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 단체가 우려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위기에 빠진 임산부나 아주 어린 아이를 품에 안은 절박한 위기에 빠진 미혼부모들이 도무지 자기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형편을 상담받기 위해 동사무소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현실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와 치부까지 공무원에게 먼저 털어놓는다는 건 일반의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했다.

또 "아이들의 생명과 삶을 소중하게 지켜야 할 입양체계 개편의 가장 큰 대의는 극히 일부 세력의 이념에 편승한, 스스로 정의라고 개념지은 '기계적인 공공성 강화'가 아니"라며 "우선 지켜내야 할 원칙은 안전하고 평화롭고 조화로운 아이들의 생명과 삶"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2012년 입양의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밀어붙인 입양특례법으로 유기아동은 두 배로 늘었고, 수많은 보호아동은 가정이 아닌 시설로 가야 했다"며 "그들의 등을 떠민 건 유감스럽게 국가였다. 국가가 만든 법과 제도와 정책이 아이들을 시설로 내몬 것"이라고 했다.

입양연대는 "먼저 시정되고 개편되어야 할 정책 분야는 바로 유기아동 대책이다. 6.30 입양체계 개편은 정작 문제가 곪아터진 유기아동의 상처는 치유하지도 않고 유연하게 충분히 만반의 준비과정을 거쳐 시도해야 할, 아직은 멀쩡하게 작동하는 입양체계에 메스를 들이댄 꼴"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의 정책은 실패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당장 위험에 빠지게 될 아이들의 생명과 삶을 국가는 결코 책임지지 않는다"며 "그저 과도기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희생'으로 치부될 뿐이다. 우리는 그 '부수적인 희생'을 결코 묵과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들은 "얼마든지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온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던, 국가에 의해 희생된 아이들의 삶은 이미 전국에 있는 보육시설 안에서 증명되고 있다"며 "이번 6.30 공적 입양체계 개편이 불러올 아이들의 희생은 또 어떤 모습으로 증명될 지를 우리는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입양연대는 정부에 △국가로부터 외면되어 온 유기아동에 대한 가정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6.30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중단하고 단 한 아이도 희생되지 않을 대비책을 먼저 강구하고 마련하라 △지금까지의 시설중심의 아동보호정책을 폐지 및 개선하고 보호아동의 가정보호 정책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진영 기자

피터스의 제주도 탐방기 IV » 7면

가진수 칼럼 '구약 시대 예배 음악가들' » 22면